

1950년대 소련 대북 무상원조의 지속과 변화*

-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을 중심으로 -

이주호**

〈차 례〉

1. 머리말
2. 전후 복구 초기 무상원조의 역할과 증액 합의
3. 추가 경제원조의 내용과 제1차 5개년계획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6·25전쟁 이후 1950년대에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 경제원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경제원조를 합의한 1956년 8월 4일 협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953년 9월에 소련은 총 10억 루블의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하였다. 무상원조 재원은 주요 생산 시설 복구에 직접 배정된 부분을 남겨놓고 1955년까지 소진되었다. 원조 재원의 소진은 북한의 향후 경제 운영에 악조건이 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소련에서 받은 차관 상환 기일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북한은 소련에 추가 지원을 호소하였다. 1956년 6~7월에 걸쳐 김일성이 북한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과 동유럽을 직접 방문하였다. 소련은 차관 상환 면제와 연기를 약속하고, 추가 무상원조 3억 루블을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년) 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상원조 내역은 식량과 원자재 위주였으며, 무상원조 외에도 대북 수출 약속을 포함하였다.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은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기존 무상원조의 사용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고, 북한은 소련의 공업화 정책 비판을 수용하였다.

* 이 논문은 2022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북한의 공업화 구상과 북소경제협력(1953~1970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2022) 제2장 1절 1항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졸업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은 1950년대 중반 들어 북한과 소련 양국 지도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양국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주제어] 전후 복구, 무상원조, 제1차 5개년계획, 북소관계, 차관, 경제원조협정

1. 머리말

1950년대에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전체가 북한의 전후 복구를 돕기 위하여 무상원조를 제공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53년 7월의 정전협정 체결 직후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 북한에 무상원조 제공 의사를 밝혔으며, 그해 말까지 차례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에 도달하였다.¹⁾

무상원조는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원조를 매개로 소련은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계획경제 운영 전반에 자문을 제공하였다. 북한의 전후 복구계획 수행 및 향후 제1차 5개년계획 준비에 대하여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국의 정책 전망 차이는 지도부 간의 갈등 배경이 되었다.²⁾ 그리고 1950년대 중반으로 넘어서는 시점에 무상원조 재원이 점차 소진되었고, 국가의 수입 구성에서 대외원조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북한은 지구책으로 ‘천리마운동’과 같은 대중운동 형태로 집단경쟁과 증산 운동을 추진하였다. 무상원조 재원의 소진은 북한이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면 서도 그것을 ‘북한화’하는 과정의 한 배경이 되었다.³⁾

-
- 1) 주요 선행 연구로 Erik van Ree, “The Limits of Juche: North Korea’s Dependence on Soviet Industrial Aid, 1953–76,”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5, issue 1, 1989; Karoly Fendler, “Economic Assistance from Socialist Countries to North Korea in the Postwar Years, 1953–1963,” *North Korea: Ideology, Politics, Economy* (Han S. Park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6; 백준기, 『소련의 북한 전후 복구 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참고.
 - 2) 1950년대 전반에 걸쳐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 Bala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5;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3)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집단적 혁신운동, 대중적 증산경쟁운동에 대한 주요 연구로 이태섭, 『김일성

하지만 무상원조의 내용에 대하여 막상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무상원조의 총 금액과 사용 계획이 알려져 있는 정도이다.⁴⁾ 원조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북한의 전후 복구 정책과의 연관성 등은 연구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실은 무상원조의 종료에 관한 것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 무상원조는 19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앞선 시기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대북 경제 지원의 형식은 무상원조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유상 형태로 전환되고 있었다.⁵⁾ 무상원조 내용을 분석하고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 북한의 경제 현황과 변화를 보기 위하여 1950년대 전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1956년 8월 4일에 조인된 ‘소련의 대북 경제원조에 관한 협정’(이하 “1956년 8월 협정”)을 주목하고자 한다.⁶⁾ 소련의 전후 대북 경제원조 협정은 1953년 9월에 체결된 것이 첫 번째이며, 1956년 8월 협정은 두 번째이다. 경제원조는 원조 제공국과 수원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원조 제공국은 물품과 용역, 인력을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미리 합의된 원조 예정액에서 차감하였다. 수원국이 원하는대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수원국의 요구와 원조 제공국의 이해가 만난 지점에서 협상이 타결되고 협정문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1956년 8월 협정의 체결 과정과 내용은 소련의 대북 경제원조가 지속되면서도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진영의 1950년대 북한 지원의 양상과 성격을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 선인, 2007 참고.

- 4) 통사적 차원에서 북한이 전후 복구가 받은 경제원조를 다룬 연구로 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양준용 역, 『기묘에 선 북한경제: 대외경협을 통해 본 실상』, 한국경제신문사, 1992;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 경제학: 1950년대 소련, 중국, 동유럽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이시연의 연구는 미국의 냉전사 연구기관인 윌슨센터(Wilson Center)의 자료를 대폭 활용하여 전후 복구가 북한이 받은 원조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윌슨센터는 1990년대부터 구 사회주의 국가 문서고의 문서들을 대거 영입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 5) 이러한 지점을 지적한 연구로 이주호, 『1950년대 후반 소련 대외경제연락위원회(ГКЭС) 주북한대표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193, 한국사연구회, 2021 참고.
- 6)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 모두를 포함하여 경제원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이 발견된 유일한 협정이다.

반영한다.

1956년 8월 협정을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시점이다. 1956년 여름은 ‘8월전원회의 사건’ 등 북한의 대외관계 및 최고지도부 내의 내부적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⁷⁾ 일련의 선행 연구들이 1950년대 중반 북소 관계의 파열음이 경제정책 측면에서 두드러지고 있었던 점을 주목한 바 있다. 북한 경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놓고 양국 지도부의 생각이 달랐던 탓이었다.⁸⁾ 이러한 시점에 추가 무상원조의 제공은 양국의 잠재적인 갈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전후 복구가 계속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이다. 1954~1956년 3개년 인민경제복구발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곧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전후 복구와 경제 운영,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단계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상원조의 역할과 중요성은 작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외부의 지원을 계속 끌어오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했다. 본 연구는 1956년을 전후한 시점 북한과 소련의 경제 원조 협상을 통해 북소 관계의 변화를 다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련의 북한 경제 인식 및 양국 실무 협상의 내용과 소련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소련 정부 문서를 활용하였다.⁹⁾ 전후 시기 북한, 그리고 북한현대사 연구 전반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다. 6·25

7) 1956년 ‘8월전원회의 사건’은 조선로동당 내의 일부 인물들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석상에서 김 일성을 비롯한 지도부급 인물들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가 몰락한 일련의 일을 말한다. 북한의 전후 사회주의 체제 건설 과정에 얽힌 내부적 갈등과 대외 관계 양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주요 연구로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오름, 199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5;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998;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이재훈, 『1956년 8월전원회의 직후 중·소의 개입과 북한 지도부의 대응』, 『역사비평』 119, 역사비평사, 2017 참고.

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613~621쪽; 조수룡,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1957~61) 초안과 탈소련화의 개시』, 『역사학보』 249, 역사학회, 2021; 김재웅, 『195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과 북소 관계의 균열』, 『사총』 10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1.

9) 북한 공식 문헌 외에 본 연구가 활용한 문서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주북한 소련대사관 및 소련 외무성 기록이다. 그중 대다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북한 관계사료집』에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소(РГАНИ), 러시아국가 경제문서보관소(РГАЭ)의 문서이다. 이들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러시아어 원문 상태로 열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웹센터에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소련 및 동유럽 국가 문서이다.

전쟁 이후 북한의 정부 문서로 외부에 유출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신 북한의 경제 현황 및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 『경제건설』 등의 공식간행물을 이용하였다.

2. 전후 복구 초기 무상원조의 역할과 증액 합의

1) 무상원조의 소진과 연동된 비관적 경제 전망

정전협정 조인 직후인 1953년 8월초, 소련 정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에 10억 루블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북한 측에 통보하였다. 소련에 뒤이어 중국과 동유럽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도 대북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하였다. 이미 전쟁이 진행 중일 때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전후 복구 지원 의사를 밝힌바 있었다.¹⁰⁾ 김일성은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소련의 전후 대북 경제원조는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9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정부 대표단과 체결한 협정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북한 정부 대표단은 소련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상원조의 활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획을 만들어 모스크바로 가지고 갔다. 모스크바에서 9월 11일부터 협상이 진행되었고, 19일에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을 전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당시 소련과 북한이 10억 루블의 용처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은 크게 두

10) 1953년 6월 2일, 북한 정부는 북한 주재 외교관들을 모아놓고 평양시 복구 계획의 전망을 해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 박정애와 허가이는 북한의 전시 피해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아울러 아직 북한에 제공할 전후 복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의 외교관들에게, 소련과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등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원조의 내용을 말해 주었다. "Report of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in Korea," July 16, 1953,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Polish Foreign Ministry Archive. Obtained for NKIDP by Jakub Poprocki and translated for NKIDP by Maya Latynski.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53>.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여러 공장의 복구와 신규 건설에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공장의 복구와 신설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건축 자재를 제공하고, 기술자를 파견하여 건설 과정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특허를 비롯한 기술문건을 제공하고 북한인 기술자 양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둘째, 물품으로 농기계, 비료, 가축, 역마, 어선, 버스, 직물 등을 공급하고 병원 및 학교에 필요한 설비와 서적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진행하는 공장에 배분할 시설품 및 건축 자재의 공급도 포함되었다.¹¹⁾

이러한 구분은 무상원조를 구성하는 형식에 반영되었다. 소련이 건설을 지원하기로 명시하여 약속한 일련의 기업 및 건설대상의 복구 사업에 대한 재원은 건설대상 단위로 종합적인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종합 납품(комплектные поставки)’으로 호칭되었다. ‘종합납품’은 특정 기업 또는 건설 대상을 지정하고 설계와 각종 기술원조, 설비 및 자재 납품을 전달한다는 의미였다. ‘종합납품’ 이외의 두 번째 범주는 건설 대상 단위가 아니라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개별 납품(разрозненные поставки)’이었다. 북한이 요청하는 물품을 개별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각종 설비와 원자재, 연료, 기술문서, 식료품, 각종 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의미였다.

‘종합납품’과 ‘개별납품’의 무상원조 집행은 별도의 계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종합납품’은 4억 루블 이하였고, 나머지 6억 이상의 금액이 ‘개별납품’에 배정된 형태였다. 금액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계속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¹²⁾ 이렇게 1953년에 합의되어 소련이 제공하기 시작한 무상원조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1) 『소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간의 회담에 관한 소련-조선 커뮤니케』, 『근로자』 1953년 10호;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차 회의. 소련, 중화 인민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들을 방문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사업 경과 보고』, 『경제건설』 1954년 1호, 8~11쪽.

12) 이하 소련의 대북 경제원조의 구성과 1955년 말까지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은 이주호, 『1950년대 후반 소련 대외경제연락위원회(ГКЭС) 주북한대표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193, 한국사연구회, 2021, 308~309쪽.

소련이 약속한 10억 루블의 무상원조는 집행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1954년까지 전체의 2/3를 쓰고, 나머지 1/3은 1955년까지였다. 즉, 소련의 대북 무상 경제원조는 1955년까지 사용을 완료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집행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5년까지 집행 실적은 약 7억 2,000만 루블로 전체의 55.4%에 그쳤다. 그중에서 ‘개별납품’은 1955년까지 약 5억 5천만 루블이 집행되었다. ‘개별납품’의 총액이 최소 6억 루블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집행이 거의 마무리된 수준이었다. 문제는 ‘종합납품’이었다. 약 1억 7천만 루블 정도가 집행되었으며, 계획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¹³⁾ 1955년까지 무상원조의 미집행 이유는 주로 ‘종합납품’의 실행 지연에 있었다. 주로 산업생산시설의 복구와 신규 건설에 배정된 원조액의 집행이 많이 지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해당 시설의 공사가 늦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북한이 소련과의 합의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무상원조는 1955년 말이 되면 거의 소진되었다. 1956년 4월 6일에 잔여 무상원조 납품에 대한 의정서가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었다.¹⁴⁾ 7월 1일까지 ‘개별납품’ 6억 루블 중에 5억 6,400만 루블의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고, 잔여 3,600만 루블은 예비비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계약 완료분 중에 이미 북한까지 배송 완료한 것이 5억 4,980만 루블로 97.5%에 달했다.¹⁵⁾ 대상이 정해져 있는 생산시설 복구 외에 북한이 청구할 수 있는 재원은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개별납품의 소진은 북한의 전후 복구 및 경제 운영에 큰 변수가 되었다.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는데 있어 무상원조는 든든한 재원이었고, 북한의 경제 운영에 무상원조가 기여한 바가 컸기 때문이었다.

소련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 제공한 무상원조는 북한이 필요한 원자재와 설비, 식량, 기타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뒷받침하였다. 무상원조 이외의 방법은 수출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었다. 북한은 전후 복구 초

13) 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양준용 역, 『기묘에 선 북한경제: 대외경협을 통해 본 실상』, 한국경제신문사, 1992, 23쪽.

14) РГАЭ, Ф. 413, ОП. 13, Д. 7804, л. 30.

15)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2, лл. 308-309.

기부터 수출 확대를 강조하였다. 많이 수출해야 그만큼 많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53년 8월, 전후 복구 계획을 확정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으로 1954년부터 2억 5,000만 루블 이상, 1955년부터 3억 5천만 루블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었다.¹⁶⁾ 북한 당국은 3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 1956년을 앞두고 주요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품의 국산 대체 및 절약과 더불어 수출가능 품목을 더 찾아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¹⁷⁾

하지만 수출이 정말로 수입을 감당하여 무역 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지는 의문이었다. 전후 복구 첫해인 1954년의 총 수입액이 895,163,000루블이었다. 그러나 수출액은 131,444,000루블에 불과하였다. 적자가 763,719,000루블에 달했다.¹⁸⁾ 그 간격을 메운 것이 무상원조였다. 1954년 한 해 동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원조의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억 5,300만 루블에 달했다.¹⁹⁾ 무상원조는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전후 초기에 기록한 막대한 수입 적자를 메꾸는 역할을 하였다.²⁰⁾

소련 대북 무상원조 중에 북한이 필요한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개별납품’ 재원이 고갈된 상태로 1956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공한 무상원조의 진행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²¹⁾ 3개년계획(1954~

16)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 1998, 377쪽.

17) 백홍권, 「1956년 인민 경제 계획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경제건설』 1955년 10호, 22쪽.

18) РГАНИ, Ф. 5, ОП. 28, Д. 315, лл. 217; 222.

19) 1954년에 집행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무상원조 금액을 보면 소련이 약 3억 9천만 루블, 중국은 3억 1,900만 루블, 기타 국가들이 약 1억 4,400만 루블이었다. 리기영, 『8·15 해방 10주년에 대한 강연 자료』 위대한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이 인민들이 조선 인민에게 주고 있는 거대한 원조와 민주 진영 제국가들 간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평양: 국립출판사, 1955, 9~10쪽.

20) 북한과 중국의 무역도 양상은 비슷했다. 1954~1957년의 4년간 중국의 대북 수출액이 총 9억 2,220만 위안이었다고,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총 1억 3,712만 위안이었다. 차액인 7억 8,508만 위안은 무상원조로 차감되었다. “Li Fuchun’s Report on Sino-Korean Trade Negotiations,” September 30, 1957,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State Planning Commission Archives. Obtained by Shen Zhihua and translated by Jeffrey Wang and Charles Kraus.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71>.

21)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총 8억 위안 중에 1955년까지 5억 5천만 위안이 집행되었다. 소련 대북 경제원조의 내부 구성을 참고하면 상황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АВГРФ, Ф. 0102, “Протокольная запись совещания дипкорпуса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у о взаимном обмене информаци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1956년)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산업 부문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의 전후 복구가 진행 중이었다. 1953년에 결정된 전후 복구의 단계적 진행 계획에 따라 3개년계획을 실시한 이후,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향후 진행할 공공업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기계설비와 기술, 생산재의 수입은 불가피했다.

1954년 말부터 제1차 5개년계획의 입안이 시작되었다. 5개년계획에 필요한 새로운 생산시설 건설과 기술 도입을 위하여 투자 재원이 필요했다. 1955년 초에 작성된 제1차 5개년계획 구상안에 따르면, 5개년계획 기간에 필요한 외화 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수입은 27억 5,340만 루블이지만, 지출액은 총 32억 5,340만 루블에 달했다. 이미 재정 운영의 적자가 예상되었다.²²⁾

게다가 북한은 차관도 갚아야 하는 처지였다. 1957년부터 차관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 상환해야 하는 차관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 전쟁기에 소련이 제공한 561,395,154루블이었다. 1953년 9월 무상원조 협정 체결 당시 전시기에 공급된 물자는 차관으로 설정하여 차후에 갚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전쟁 이전인 1949년 3월에 북소경제문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소련이 제공한 차관이었다. 셋째, 정전협정 이후 1953년, 1955년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한 군사 차관이었다.²³⁾ 첫 번째 종류의 차관만 약 5억 6,100만 루블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차관을 합친 금액이 약 3억 6,200만 루블이었다. 두 금액을 합하여 1957년부터 상환이 예정된 소련 제공 차관은 약 9억 2,300만 루블이 넘는 금액이었다.²⁴⁾ 1953년에 소련에서 받은 무상원조 10억 루블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차관 상황은 향후 제1차 5개년계획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었다. 수출할 수 있는 물품들을 차관 상환에 쓸 가능성이 높았다.

요컨대, 1953년 9월에 소련이 협정으로 약속한 무상원조 10억 루블은

“выполн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по безвозмездной помощи корею,” л. 3.

22) РГАНИ, Ф. 5, ОП. 28, Д. 315, л. 216.

23)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2, 선인, 2010, 81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 관계사료집』 76, 2014, 55쪽.

24)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80, 2016, 68쪽.

1955년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주요 기업과 생산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늦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무상원조 구성의 특징상, 금액상으로는 잔여분이 있었지만, 북한이 원자재와 물품 수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1955년 말까지 소진된 상태였다는 사실이었다. 아직 3개년계획이 끝나지도 않았고,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의 수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무상원조 재원의 소진은 북한의 경제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과 같았다. 게다가 차관 상환 기일까지 돌아오고 있었다. 북한의 자체적인 재정 운영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차관 상환 연기와 추가 경제원조 협정 체결

북한은 소련이 한번 더 도와주길 원했다. 10억 루블의 무상원조가 금액 전체로 본다면 아직 완전히 소진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임박한 차관 상환 문제도 북한의 경제 운영에 악조건이 될 예정이었다. 북한 지도자들은 우선 차관 문제를 소련과의 협의 안건으로 올렸다. 소련이 차관 문제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희망하였다.

1956년 2월에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석한 북한대표단은 소련 정부와 차관에 관한 협상을 추진했다. 대표단장인 북한 내각부수상 최용건은 소련 외무상 몰로토프(B. M. Молотов)와의 면담에서 전쟁기 차관의 상환을 취소하고 다른 차관들의 상환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였다.²⁵⁾

그리고 북한은 추가 경제원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1956년 4월 말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 축하사절단으로 소련공산당의 브레즈네프(Л. И. Брежнев)가 평양을 찾았다. 그에게 북한 지도부는 추가 원조를 받고 싶다는 희망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당시 예정되어 있던 동유럽 국가 순방 일정에 맞추어 모스크바에 들려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

25)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3, 2013, 385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80, 2016, 73~79쪽.

를 전달하였다.²⁶⁾

북한 정부는 소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 추가 무상원조를 요청하였다. 5월 11일, 김일성은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대담을 나누었다. 북한 정부가 제1차 5개년계획을 작성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방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일성은 향후 수년간의 경제 운영에 약 10억 루블의 재원이 부족하며, 최소 6~7억 루블의 원조만 얻어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소련이 3~4억 루블, 중국이 2~3억 루블만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였다.²⁷⁾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 정부의 추가 원조 결정 여부였다. 소련이 먼저 확실히 약속을 해주어야 동유럽 국가들에서 많은 원조와 경제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터였다.²⁸⁾ 소련의 요구대로 동유럽 방문 일정을 줄인 것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처음에 북한 정부는 6월 초부터 8월 초에 이르는 긴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7월 초에 모스크바로 귀환하여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련 측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북한이 소련의 추가 원조에 사활을 걸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⁹⁾

추가 경제원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1956년 5월부터 전달되었다. 5월 22일에 김일성이 직접 이바노프(В. И. Иванов) 주북한 소련대사를 만나 필요한 물자들의 내역을 전달하였다. 첫째, 40만 톤의 강철제품 수입을 요청했다. 그 중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가스관 제품 4만 톤이 포함되었다. 건축에 필요한 철근, 배관, 전선 등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무역 사정으로는 충분히 수입할 수 없는 사정임을 호소하였다. 둘째, 매년 직물 2,000만 제곱미터(m²) 및 면직물 생산용 면화 5,000톤의 공급을 요구하였다. 전쟁 이전에 운용했던 화학

26)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80, 2016, 90쪽.

27)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2, лл. 199~200.

28)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3, 2013, 437~440쪽.

29)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순방은 6월 7일 동독 베를린에 도착하여 7월 6일에 모스크바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단축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3, 2013, 426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80, 2016, 99~104쪽.

섬유 공장의 복구가 진행중이니 그 이전까지 직물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³⁰⁾ 셋째, 매년 양곡 5만 톤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1960년부터 농업용 화학비료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예정이었지만, 그 이전까지 매년 최소 2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 외에도 농업에 필요한 트랙터와 자동차, 광산 설비 등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김일성이 언급한 내용은 금액으로 약 5억 루블에 달하였다.³¹⁾

소련은 북한의 요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당시 소련 외무성계통으로 생산된 보고서들을 보면 지원에 긍정적이었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과, 추가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북한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곧 무상원조의 도움 없이 경제를 운영해야 함에도, 아직 다량의 자재와 설비를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품들을 온전히 차관 상환으로만 투입한다면 북한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했다. 인민들의 물질 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공산품과 식료품의 급격한 증산도 기대하기 어렵고, 원활한 수입을 하기 위한 수출품의 확보가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추가 경제 원조를 줄 필요가 있었다. 차관 문제의 경우, 중국이 6·25전쟁 직후에 북한의 채무를 모두 일소한 것이 중요한 참고 대상이 되었다. 그간 제공된 차관이 북한의 방위를 위한 군사력 부문에 사용되었으며, “조선 인민의 투쟁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에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고려되었다.³²⁾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소련을 출발하여 동유럽 국가들을 순방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온 7월 6일부터 양국 수뇌부간 회담이 진행되었다. 김일성을 만난 소련 내각 총리 불가닌(Н. А. Булганин)은 북한 인민들의 생활

30) 여기에서 김일성은 청진방직공장을 언급한다. 청진방직공장은 1930년대에 세워진 다이니혼방직 청진공장으로, 갈대를 가공한 펄프를 원료로 인조섬유를 제조하였다. 이주호,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식민지 경제유산의 계승과 극복 과정에 분단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3, 고려사학회 2016, 290~291쪽.

31)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3, 2013, 440~442쪽.

32) АВПРФ, Ф. 0102, ОП. 10, “О состоянии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краткая справка/,” лл. 4-5; АВПРФ, Ф. 0102, ОП. 10, “Справка о мероприятиях ТП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повышению жизненного уровня населения,” лл. 17-18.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답을 주었다. 이에 김일성은 감사를 표시하며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³³⁾

회담 이후, 소련 정부는 내각 제1부총리 미코얀(А. И. Микоян)이 이끄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북한이 요청한 문제들을 검토하였다.³⁴⁾ 북한의 요청 사항으로 차관 상환의 면제 또는 기한 연기, 향후 5년간 북한에 필요한 물품의 무상 공급, 흥남비료공장 복구 문제 확정 등이 있었다.³⁵⁾ 우선 차관 상환의 면제 및 기한 연장 조치가 결정되었다. 총 5억 7,600만 루블의 차관 상환이 취소되었고, 1949년 3월의 북소경제문화협정 당시 합의로 제공된 차관 및 1953년의 군사차관을 합친 1억 5,200만 루블은 1960년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이 연기되었다.³⁶⁾

추가 무상원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최고지도부가 합의한 계획에 입각하여 모스크바와 평양의 양측 실무진이 의견을 교환하며 조율하는 과정이었다. 7월 말에 양국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³⁷⁾ 최종적으로 1956년 8월 4일에 추가원조 제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1956년 6~7월에 유럽으로 향한 북한정부 대표단은 소련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했던 1953년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나라가 북한에 두 번째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신규 무상원조를 제공한 국가는 소련과 헝가리, 불가리아뿐이었다. 동독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추가 원조를 제공하지 않았고, 기존 경제원조의 사용계획 변경 정

33)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80, 2016, 114~115쪽.

34)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0, лл. 352-353.

35) 북한이 무상원조로 요청한 것은 향후 5년간 면적물 2,000만 미터와 면화 5,000톤, 사탕 50,000톤, 식물성 기름 20,000톤 및 향후 3년간 화물자동차 2,000대와 트랙터 1,000대, 각종 전선제품 2,000미터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80, 2016, 116~119쪽.

36) "Speech by Kim Il Sung at the August Korean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Plenum," August 30, 1956,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GARF, Fond 5446, Opis 98, Delo 721, Listy 69-103. Translated by Gary Goldberg.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20166>.

37) 1956년 7월 24일, 주소련 북한대사관은 소련 무역성 동방국장(Начальник Отдел Восто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에게 무상원조 및 상품거래 형식으로 북한에 전달할 물품 계획을 평양의 실무 기관에서 검토하고 동의를 전달해왔음을 알렸다. РГАЭ, Ф. 413, ОП. 13, Д. 7804, л. 59.

도만 허용했다.³⁸⁾

중국은 무상원조 제공을 거절하였다. 북한의 요청은 있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북한 정부 대표단의 소련 및 동유럽 방문이 이루어졌던 1956년 7월에 북한은 중국에 다음 해인 1957년의 양국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자는 요청을 제기하였다. 전달된 무역계획서의 내용에 북한이 수입하려는 총 1억 8,500만 위안의 상품에 대한 비용 지불 중에 약 27%에 해당하는 5,000만 위안을 신규 무상원조로 제공해달라는 것이 있었다. 1953년 11월에 결정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재원이 1957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음을 생각하면, 북한의 이러한 요청은 사실상 추가 경제원조를 요청하는 의미였다. 하지만 중국은 3개월여에 걸쳐 대답을 주지 않다가 11월에 최종적으로 추가 원조 제공 거절 의사를 밝혔다.³⁹⁾ 중국의 경제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무상원조를 주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던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은 1956년에 소련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추가 경제원조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1956년 초부터 추가 원조를 받기 위한 협상을 모색하였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소련이었다. 모스크바 방문 의사를 밝히고 협상이 시작되었다. 소련도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모른척하지 않았다. 1957년부터 상황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차관을 크게 감면하고, 아울러 무상원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956년 8월 협정이 체결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가 무상원조 제공을 거절했지만, 소련은 예외였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의 개시를 앞두고 무상원조를 증액하여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8) 헝가리는 무상원조 750만 루블과 차관 750만 루블을 약속하였고, 불가리아는 무상원조 3,000만 루블, 루마니아 무상원조 2,400만 루블을 약속하였다. 알바니아는 도로포장용 역청 1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유럽 국가 이외에 몽골이 밀 5,000톤, 양 30,000마리, 젖소 2,000마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АВПРФ, Ф. 0102, “Справка об итогах поезд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в страны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ции,” лл. 1-6.

39) 선즈화 저, 김동철·김민철·김규범 역, 『최후의 천조(天朝):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2017, 515~516쪽;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190쪽.

3. 추가 경제원조의 내용과 제1차 5개년계획

1) 무상 공급과 무역을 통한 원자재 확보

1956년 8월 4일에 체결된 “소련 정부가 북한 정부에 경제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협정”은 총 다섯 개의 조항과 부록 1·2번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⁰⁾ 제1조는 1956년부터 1961년까지 총 6년간, 3억 루블 규모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기한과 금액이 명시되었다. 제2조는 전달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것이다. 전달 기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었다. 1957년부터 5년간 매년 일정량을 전달하는 것, 1957년 1분기에 한 차례 전달하는 것, 마지막으로 1956년과 1957년에 걸쳐 제공하는 것이었다. 제3조는 제2조에 언급된 물품의 지불 비용 문제이다. 여기서 부록 1번 및 2번으로 나누어 언급된다. 부록 1번은 3억 루블의 무상원조로 지불하고, 부록 2번의 물품은 3억 루블이 아니라 북한이 해당 연도의 북소 무역협정에 포함시켜 지불하는 것이었다. 제4조와 제5조는 양국 무역 기관이 실무 합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부록 1번 및 2번에 따른 물품을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협정문에는 소련이 무상원조로 공급할 물품과 무역 형식으로 소련이 제공할 물품의 목록이 연도별 수량까지 포함하여 명시되었다. 다만 각 년도 북소 무역협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여 수정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아래 <표1>은 1956년 8월 협정으로 확정된 향후 6년간 소련의 물품 제공 내용을 보여준다.

40) “Соглашение об оказ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ССР правительству Коре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и,” РГАЭ, Ф. 413, ОП, 13, Д. 7748, лл. 1-4.

〈표1〉 1956년 8월 4일 협정 부록: 소련의 대북 상품 납품 계획

① 무상원조

품목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1961년	합계
압연강재(톤)	-	46,500	46,500	46,500	46,500	-	186,000
통나무(㎥)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450,000
설탕(톤)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식물성기름(톤)	-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쌀(톤)	40,000	-	-	-	-	-	40,000
젖소(두)	1,000	1,000	-	-	-	-	2,000
면직물(㎡)	-	1,000만	1,000만	1,000만	1,000만	1,000만	5,000만
면사(톤)	-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6인용방한천막(개)	2,000	4,000	-	-	-	-	6,000

② 무역거래

품목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1961년	합계
알곡(톤)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면화(톤)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강철관(톤)	3,500	3,500	3,500	3,500	-	14,000
케이블제품(km)	665	665	670	-	-	2,000
화물자동차(대)	665	665	670	-	-	2,000
트랙터(대)	335	335	330	-	-	1,000
덤프트럭(대)	50	-	-	-	-	50
굴삭기(대)	20	-	-	-	-	20
이동식크레인(대)	30	-	-	-	-	30

* 자료: РГАЭ, Ф. 413, ОП. 13, Д. 7748, ЛЛ. 3-4.

1956년 8월 협정의 내용과 부록은 당시 북한의 경제 사정과 협상에 임한 양측의 입장을 보여준다. 우선 기한을 보자. 무상원조 및 구매 목록의 기한은 1956년부터 1961년까지 6년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제외하면 1957년부터 1961년까지 대체적으로 매년 동일한 분량의 물자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1957년부터 시작될 제1차 5개년계획과 맞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협정 체결 시점이 1956년 8월임에도 불구하고 1956년이 공급기한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기한의 설정은 북한의 요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급자 측이 해당 물품들을 시급히 처분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은 기한이 4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된 것은 북한이 긴급하게 필요로 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주로 식료품과 건축 자재 종류였다. 4개월내로 통나무(목재) 50,000입방미터(m³)와 쌀 40,000톤, 젓소 1,000마리, 방한천막 2,000개의 공급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1957년에 젓소 1,000마리, 방한천막은 두 배 많은 4,000개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곡물 40,000톤과 젓소 2,000마리를 1956~1957년의 2년여에 걸쳐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식량 사정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첫 번째로 정상적인 농업 운영이 가능했던 1954년부터 수확량 부족으로 인하여 곡물 수매 및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배급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⁴¹⁾ 곡물 증산 및 식량 자급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곡물 수입은 불가피했다. 추수가 시작된 1955년 9월에, 북한 정부 측은 최소한 25만 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임을 인정하였다.⁴²⁾ 사실상 북한은 식량 자급에 실패하고 있었고 매년 일정한 양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1956년 8월 협정은 무상원조와 무역거래 품목 모두에 곡물을 포함하였다. 40,000톤의 곡물을 무상으로 받고 1957년부터 매년 역시 40,000톤의 곡물을 소련에서 수입하는 계획이었다. 곡물 외에 젓소가 포함된 것은 축산업 발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상원조에 건축 관련 물품이 포함된 것은 북한의 건설 부문 부진을 반영한다. 도시의 시가지와 주요 건물, 사회기반시설, 산업단지의 건축 현장 등의 사업 부진이 문제였다. 전후 복구가 개시된 이후 각종 건축 현장의 사업 부진은 일찍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 1954년 3월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41) 1954년 가을의 수확량 부족과 곡물 수매 부진은 1955년 봄의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 이에 관하여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개년계획(1954~56) 수정과 1955년 봄 식량 위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참고.

42)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3, 2013, 289쪽.

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경제부문 비판 내용은 건축 부문의 기술 부족과 무계획적인 시공 등을 언급하고 있다.⁴³⁾ 조선로동당 최고지도부 수준의 비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건축 자재의 부족, 건설 부문의 낮은 기계화율, 부실한 설계 등은 1956년까지도 문제로 언급되고 있었다.⁴⁴⁾ 그중에서 건축자재 부족에 대하여 북한은 소련의 경제원조를 통하여 해결을 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 8월 협정의 물품 목록은 목재와 방한천막, 그리고 덤프트럭,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을 포함하였다. 방한천막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었다.⁴⁵⁾ 덤프트럭,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은 모두 건축 부문 기계화에 해당하였다.

협정이 약속한 물품 중에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결정하는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의(衣)'와 관련이 있는 면화와 면사, 면직물이 포함되어 있다. 면화는 1차 원료이며, 면사와 면직물은 모두 2차, 3차 가공품이다. 북한은 1차 원료인 면화만 들여온 것이 아니라 가공품인 면사와 면직물까지 소련에서 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면화를 들여온 것은 그것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북한의 면방직 공업시설로 전전(戰前)에 착공하여 1950년부터 가동이 시작되었던 평양종합방직공장이 있었다.⁴⁶⁾ 소련의 무상원조 지원을 받아 1955년부터 가동이 재개되었으나, 공장 생산량은 필요한 직물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면화 수입과 더불어 면사와 면직물을 들여와야 하는 이유였다.

비용 지불 문제를 언급한 제3조 이하의 내용 및 부록 1, 2번의 존재는 1956년 8월 협정이 무상원조만 취급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협정은 무상원조 3억 루블만 언급하고 있지만, 제2조에 언급된 상품의 비용 전체가 무상원조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었다. 양국은 1957~1961년에 '교역으로' 1억 7,000만

43) 김일성, 「산업 운수부문에서의 제 결합들과 그를 시정하기 위한 당·국가 및 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당면과업」, 『근로자』 1954년 4호(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57, 2008, 283~284쪽).

44) РГАНИ, Ф. 5, ОП. 28, Л. 412, III. 156-157.

45)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80, 2016, 93쪽.

46) 이주호,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식민지 경제유산의 계승과 극복 과정에 분단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3, 고려사학회 2016 참고.

루블의 상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⁷⁾ 교역으로 제공한다는 항목은 무상이 아니었다. 경제원조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의 '수입'이고 소련의 '수출'이었다. 소련이 상품을 공급하되, 북한이 그만큼의 상품을 소련에 수출하여 지불하는 것이었다.

경제원조 협정에 무역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이것은 차관과는 다른 형태의 경제 지원이었다.⁴⁸⁾ 소련이 일정량의 대북 수출을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원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매년 무역합의를 통하여 양국이 무역을 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수출 역량이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만큼 수입, 즉 소련의 대북 수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1956년 8월 협정의 해당 문구는 일정량의 수출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련이 자국의 수출에 상응하는 북한의 지불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었다. 필요한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일 수 있으나, 지불의 기한과 방법을 무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무상원조는 분명히 아니었다.

무상원조와 무역거래 목록은 서로 전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면사와 면직물은 무상원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면화는 무역 목록에 포함되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 각기 무상원조와 상품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무상원조 목록에 압연강재 18만 6천 톤이 포함되었고, 무역거래 품목에 압연강재 제품의 하나인 강철관 14,000톤이 있었다. 압연강재 전체로 보면 20만 톤인데 일부만 무역거래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곡물은 무상원조의 비중이 적고 무역거래에 포함된 것이 훨씬 더 많았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1956년 40,000톤으로 그치며, 이후 1957년부터 5년간 매년 40,000톤씩 총 20만 톤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47)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1, л. 226.

48) 선행연구들은 1억 7,000만 루블을 '차관'으로 해석하였다.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18쪽;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경제학: 1950년대 소련, 중국, 동유럽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99쪽.

물품 배치의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경제원조 협정에 무역거래, 다시 말해 수출을 한다는 약속이 포함된 사실 자체에서 의미를 추정해볼 수 있다. 그것 자체로 소련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차관으로 설정하여 향후 상환을 가능케 하는 것도 아니었다. 목록으로 정해진 물품을 북한에 판매하기로 규정한 점에서 북한에 호의적이었지만, ‘무역협정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양국의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 소련이 향후 5년간 해당 물품들을 대북 수출 품목에 포함시키는 한, 무역 균형을 위하여 북한이 대소 수출을 그만큼 보장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수출을 의무화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조건부’ 판매 약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물품이 양쪽에 분리되어 배치된 이유로 소련의 공급 능력, 다시 말해 무상원조 제공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은 협정 체결 이전 양국 협상 과정에서 처음에 무상원조 목록에 포함된 물품이 소련 측의 제안으로 ‘무역거래’ 품목에 포함되는 일이 있었던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강철관을 무상원조에 포함시켜 받고자 하였으나 소련이 최종 협의 과정에서 제외시켰다.⁴⁹⁾ 소련 측에서 대북 수출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무상원조’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상품거래’ 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소련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무역거래’ 품목의 존재는 소련이 북한의 요청을 모두 수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일단 1956년 7월 초, 북한 정부 대표단이 일차로 모스크바에 머물렀을 때 열린 회담에서 북측이 요청한 내용은 협정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상품에 따라 북한의 요청과 다른 것도 있었다. 면직물 2천만 m²와 면화 5천 톤 요청은 면직물 5천만 m²의 무상 제공과 면화 1만 톤의 상품거래 약속으로 수량이 더 늘어났다. 하지만 강철 수량은 요청한 것보다 줄어들었다.

49) РГАЭ, Ф. 413, ОП. 13, Д. 7804, л. 59.

김일성은 강철제품 40만 톤을 요청하였으나, 확정된 1956년 8월 협정으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4년간 무상원조와 판매로 소련이 공급할 압연강재의 총수량은 20만 톤에 불과했다. 북한이 요구한 수량의 절반이었다. 이것은 제1차 5개년계획을 앞두고 북한의 강제 조달 계획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내 제강산업의 육성, 그리고 증산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⁵⁰⁾

1956년 8월 협정의 협정문 및 부록은 종래 3억 루블로만 알려졌던 소련의 추가 무상원조 결정의 내용과 성격을 보강하여 알려준다. 경제원조의 내용은 무상원조의 증액이 기본이었고, 거기에 더하여 소련의 대북 수출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1956년에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과 원자재 중심의 추가 무상원조 제공 대상은 북한의 경제 현황을 반영하였다. 또한 소련이 북한의 요청에 전부 응한 것은 아니었음도 알 수 있다.

2) 공업화 정책의 속도 조절과 무상원조 완료

3개년계획이 끝나는 1956년에, 제1차 5개년계획을 앞두고 북한의 전후 복구 및 향후 경제 운영 계획을 두고 북한과 소련 양국 지도부가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소련 최고지도부는 4월에 개최된 북한의 제3차 조선로동당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이 제출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의 내용, 즉 투자 대상의 공업 선택을 놓고 소련과 북한은 의견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소련은 전후 복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빠른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관적으로 보았다.⁵¹⁾

50) 1956년 12월에 김일성이 평양 인근의 강선제강소를 직접 방문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강선제강소는 압연강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소였다. 현지지도 이후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은 계획 수량 이상의 증산을 결의하였다. 전석단, 『조선 로동당의 명도 하에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성과와 그 의의』, 『력사논문집 (사회주의 건설편)』 4(과학원 력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편),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43~44쪽.

51)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139~142쪽.

소련은 인민 생활수준의 개선을 중심으로 농업을 비롯한 기본적인 경제 운영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을 추천하였다. 북한도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소련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했다. 소련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추가 무상원조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자국의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고 정책 개선을 약속해야 했다. 1956년 5월에 김일성이 직접 소련대사 이바노프에게 무상원조 추가 요청을 전달할 때, 김일성은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 북한 정부가 소련 측이 조언한 내용대로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있으며 자구책을 찾고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수년 내로 필요한 것을 수입할 수 있을 만큼 수출액을 늘리는 것, 그리고 화학섬유와 화학비료 생산을 본 궤도에 올려 생필품인 직물의 공급과 농업의 증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⁵²⁾ 자국의 경제적 사정,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취한 정책 수정을 제시하면서 신뢰를 요구하는 양상이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소련인들에게 인민의 생활 수준이 아직 열악하다는 지점을 호소하여 소련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외무상 남일은 소련과 동유럽으로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 정부 대표단의 출발 직전에 소련대사 이바노프를 만나서 경제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근거는 인민생활 수준이었다. 남일은 김일성이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들의 생활을 김일성이 직접 보고, 북한 사람들의 생활 사정과 차이난다는 점을 느끼길 원한다는 내용이였다.⁵³⁾ 이러한 내용을 굳이 전달한 이유는 당시 소련측이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었던 지점과 관련하여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호소하고자 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내각 총리 불가닌을 만나서 한 대화도 같은 패턴이었다. 김일성은 인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불가닌은 두 번째로 김일성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북한의 기본 과제는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임을 그에게

52)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3, 2013, 440~442쪽.

53)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3, 2013, 445쪽.

주지시켰다.⁵⁴⁾

소련은 무상원조 제공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운영과 향후 제1차 5개년계획으로 대표되는 산업 정책 전반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결의하였던 공업화 구상은 다소 후퇴하였다. 김일성을 대표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소련과 동유럽에서 추가 무상원조를 약속받아온 이후에 귀국 보고를 겸하여 1956년 8월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8월 전원회의 사건'의 현장이기도 했던 이 전원회의에서 지도자들은 소련을 비롯한 경제원조 제공국들과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역량에 맞는 계획을 작성하여 투자규모가 크고 가동 예상 시일이 긴 것은 “당분간” 중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하여 생산을 개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 둘째, 추가적 투자 없이 현존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고 노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셋째,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협력과 국제분업 원칙을 받아들여, 자연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공업 부문을 발전시키고 외화 획득을 추진한다.⁵⁵⁾

회의에서는 대량의 자본투자와 긴 기간이 필요한 대형 공장들의 건설을 임시로 연기하고 국내의 천연자원과 경제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로 평양에 건설 예정이었던 대규모 전기설비공장, 화장품공장과 김책제철소의 예정된 복구 공사를 중지하기로 하였다.⁵⁶⁾ 3개년계획기 복구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향후 투자의 원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⁵⁷⁾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인 1957년을 앞두고 개최된 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절약 강화 운동을 제기하였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갖추고 생산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면서 노동력과 자재, 자금을

54)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80, 2016, 104·115쪽.

55)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 1998, 775~776쪽; АВПРФ, Ф. 0102, “Справка об итогах поезд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в страны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ции,” л. 8.

56) РГАНИ, Ф. 5, ОП. 28, Д. 486, лл. 5-6.

57) 채희정,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경제 정책』, 『경제건설』 1956년 11호, 20쪽.

최대한으로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원 및 신규 투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생산설비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했다.⁵⁸⁾ 수입 기자재를 절약하고 대체가능한 국산품을 생산하는 정책으로 인민들을 동원해야 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후대에 ‘천리마운동’이라 불리게 되는 집단 동원 및 집단적 혁신운동이 시작되었다. 공업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부원천을 동원한다’는 취지로 생산 현장의 예비 물자들을 적발하고 아울러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생산성과 기술 개선을 달성하려는 목적이었다.⁵⁹⁾

급진적 공업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부분적 일부 지도 일꾼들”이 경제발전 정책의 추진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일부 경제 기관 일꾼들”은 5개년계획의 첫째인 1957년 계획 작성에서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⁰⁾

투자의 집중 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이 “건설 대상의 선후차와 중점을 정확히 타산”하도록 하며, “현 계단에서 긴급하지 않은 대상”들은 차후로 연기하도록 했다. 먼저 집중의 대상이 될 조건은, “전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 및 인민 생활에 긴요하게 련관”이 있거나, 설계문건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였다. 그리고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것에 우선 조업 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자금과 자재, 기술 및 로력을 집중시켜 준공 기일을 단축시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이 제시되었다.⁶¹⁾

소련이 북한의 공업 복구 및 산업 정책 전반에 부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었다. 인민생활 개선과 농업 증산에 필요한 부문에는 호응하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흥남비료공장의 화학비료 생산시설 증설이었다. 식민지

58) 리중원, 「내부 원천의 적극적 탐구와 합리적 리용은 사회주의의 경제 건설의 강력한 물질적 역량이다, 『경제건설』 1957년 1호, 15쪽.

59)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623~626쪽;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1, 선인, 2007, 133~134쪽.

60) 「(권두언)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은 계속 관철되어야 한다, 『경제건설』 1957년 12호, 2쪽; 전석담, 『조선 로동당의 령도 하에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성과와 그 의의』, 『력사논문집 (사회주의 건설편)』 4(과학원 력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편),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41~42쪽.

61) 「(권두언) 1958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자, 『경제건설』 1957년 7호, 3~4쪽.

기에 만들어진 한반도의 대표적인 대기업이자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홍남비료공장은 1953년에 소련이 약속한 무상원조 사용 계획에 따라 복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은 1956년 들어 3개년계획으로 결정된 복구 계획 이상의 신규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추가적인 생산설비의 도입 및 기술 지원을 받아야 했으므로, 소련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였다. 1956년 6월 부터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소련의 지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을 때, 소련 내각총리 불가닌에게 제출한 비망록에 포함되었다.⁶²⁾

소련 지도부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여 홍남비료공장의 생산시설 확장에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홍남비료공장의 신규 생산라인 건설 기한을 단축하라는 과제를 제기하였다.⁶³⁾ 소련이 홍남비료공장의 추가 건설 계획에 동의한 배경은 북한의 농업 전망과 관련이 있었다. 북한은 식량 자급도 달성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보다 빨리 농산물 증산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화학비료 증산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1956년 6~7월 모스크바의 양국 정부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북한의 실제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파견하였다.⁶⁴⁾ 농업, 건설, 과학원, 그리고 화학공업 분야 전문가 대표단이 1956년 4분기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선택된 분야들은 경제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영역이었다.⁶⁵⁾ 그중에서 소련의 화학공업 전문가대표단은 홍남비료공장과 분궁화학공장 등 화학공업 기업들을 시찰하고 북한의 지원 요청 구상의 적절성과 향후 화학공업 개발 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북한 정부는 자문 내용에 근거하여 홍남비료공장의 복구 및 신설의 최종 계획을

62) РГАЭ, Ф. 413, ОП. 37, Д. 37, л. 122.

63) РГАНИ, Ф. 5, ОП. 28, Д. 486, л. 6.

64) 전성복,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친선적 유대의 가일층의 공고화』, 『인민』 1956년 7호, 24쪽.

65) 1956년 10~12월에 걸쳐 두 팀의 농업 전문가들이 북한을 찾았다. 해당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은 북한에 체류중인 소련대사관 및 정부 고문들이 전원 참석한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북한 정부에 정책 권고안으로 전달되었다. 이주호, 『1950년대 후반 소련 대외경제연락위원회(ГКЭС) 주북한대표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193, 한국사연구회, 2021, 313~314쪽.

구성하였다.⁶⁶⁾

최종적으로 소련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1957년 3월로, 생산설비 규모를 확정하고 1953년 9월에 제공된 10억 루블의 무상원조 중에서 잔여 재원을 활용하기로 하였다.⁶⁷⁾ 북한 정부가 매우 기다리던 결정이었다. 김일성은 소련 대사에게 직접 감사를 표시하였다.⁶⁸⁾ 북한은 이미 소련의 설비와 기술자들의 도착만 기다리고 있었기에 공사는 속행될 수 있었다. 1958년 4월 19일에 신규 생산시설 가동식이 열리어,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정부의 수뇌부들과 소련 화학공업성 부상이 단장으로 온 소련정부 축하사절단이 참석하였다.⁶⁹⁾

공장 가동이 시작된 1958년 4월은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해당하였다. 흥남비료공장의 가동 시점은 전후 시기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원조의 집행이 1950년대 후반에 완료된 것의 일환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의 <표2>를 보자.

<표2> 1953~1960년 소련 무상원조의 내역별 사용 실적 (단위: 루블)

	1953~1955	1956~1960	1953~1960
개별납품	553,668,000	355,644,000	909,312,000
종합납품	165,612,000	223,776,000	389,388,000
합계	719,280,000 (55.4%)	579,420,000 (44.6%)	1,298,700,000 (100%)

※ 자료: 나탈리아 바자노바 지, 양준용 역, 『기रो에 선 북한경제: 대외경험을 통해 본 실상』, 한국경제신문사, 1992, 23쪽. 원자료의 숫자는 1961년 소련의 화폐개혁을 반영한 신(新) 루블 금액이나, 구(舊) 루블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표2>는 1953년과 1956년 두 차례에 걸쳐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총 13억 루블의 무상원조 집행 실적을 ‘종합납품’과 ‘개별납품’로 구분하고 아울러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 13억 루블의 집행은 1955년까지 55% 이상이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1956년 이후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무상원조 중에서 ‘개별납품’과 ‘종합납품’의 비율은 각각 약 9억 루블과 4억 루블로 70%와 30%

66) РГАНИ, Ф. 5, ОП. 28, Д. 412, лл. 338-339.

67) РГАЭ, Ф. 365, ОП. 2, Д. 64, л. 144.

68)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4, 2013, 8~9; 28쪽.

6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75, 2014, 106~109쪽.

었다. ‘개별납품’ 형태로 받은 무상원조는 1955년까지 사용된 금액이 이후 시기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정도로 많다. 하지만 ‘종합납품’은 1956년 이후에 집행된 금액이 더 많다. 다시 말해, 소련의 원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생산시설의 건설 완료는 주로 195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다.

1950년대 소련 무상원조의 전체 집행 현황을 보면, 1956년 8월 협정은 1955년까지 소진된 ‘개별납품’을 연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무상원조의 증액은 전후 복구가 아직 진행중인 상황에서 북한 정부의 경제 운영 및 산업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심지어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였다. 협정에 포함된 물품 내역은 이후 유동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무상원조 대상으로 포함된 통나무(목재) 공급 내용은 이후에 사라졌다. 연해주지역에서 북한과 소련이 공동으로 벌목을 진행하고 생산된 목재를 양국이 나눠 갖는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⁷⁰⁾ 북한은 해당 금액만큼의 다른 상품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무역 협상과 함께 무상원조 물품 협상이 이루어졌다. 협상에 새로운 물품을 포함시켜 반영시킬 수 있었다.⁷¹⁾

1956년 8월 협정에 의한 무상원조는 원래 1961년까지 집행 예정이었지만, 1960년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도 무상원조 계정의 상품 납품 계획은 1961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잔여 재원을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⁷²⁾ 제1차 5개년계획이 1959년에 조기 완료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1953년 9월에 약속된 10억 루블 무상원조의 사용은 1959

70) 소련은 목재 수출 대신, 북한 노동력을 들여와 벌목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제기하였다. 1956년 11월에 소련을 찾은 북한 실무대표단은 안건으로 소련 영내에서 북한이 직접 가공용 목재를 벌목하여 조달하는 절차와 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였다. ПГАЭ, Ф. 365, ОП, 2, Л 27, л. 188. 연해주 지역 북한과 소련의 공동벌목은 1958년에 시작되어 1960년대 초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1967년부터 재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심의섭, 『북한의 황러시아 인력협력: 벌목공을 중심으로』, 『경영연구』 18권 1호,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 참고.

71) 예를 들어, 1958년 1월에 결정된 ‘1958년도 무상원조 납품 상품 목록’은 협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압연강재와 목재, 설탕, 식물성기름, 면사, 면직물 외에 새로운 물품으로 석탄과 송아지, 양봉용 벌, 오리알을 포함하였다. ПГАЭ, Ф. 413, ОП, 37, Л 185, лл. 3-4.

72) “Protocol between the USSR and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delivery of Soviet goods in 1960,” George Ginsburg and Robert M. Slusser, *A Calendar of Soviet Treaties, 1958-1973*, Alphen aan den Rijn: Sijthoff, 1981, p.86.

년에 종료되었다.⁷³⁾ 정전협정 체결 이후 소련이 제공한 대북 무상 경제원조는 이것으로 사용이 완료되었다.

1956년은 '8월전원회의 사건'으로 북한 내부에 큰 소용돌이가 있었던 해였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특히 소련은 북한의 국정 운영에 크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소 관계에도 영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북한 경제 지원은 계속되었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 초반에 소련의 정책 조언을 강하게 의식하여야 했다. 무상원조는 1950년대 말이 되어서야 종료되었다. 양국 관계의 변화가 보다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1956년보다 이후의 일이었다.

4. 맺음말

1953년의 첫 번째 원조 협정으로 제공된 무상원조는 주요 시설 및 산업체 복구와 신설에 사용하기로 확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1955년 말까지 대체적으로 사용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을 앞두고 계속 많은 것을 소련에서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존의 무상원조 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내부 원천이나 수출 자원의 전망도 밝지 않았다. 게다가 1957년 이후에는 앞서 소련이 제공한 차관의 상황이 돌아오고 있었다. 북한은 소련의 호의를 기대하였고, 북한 정부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하여 협상하였다. 소련은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관의 삭감 및 상환 기한 연장에 동의하였고 또한 두 번째 경제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소련은 추가 무상원조 3억 루블을 약속하였다. 주로 식량과 원자재 위주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제1차 5개년계획으로 예정된 기간 내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소련은 같은 기간 무상원조 외에 1억 7천만 루블의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총 4억 7천만 루블에 해당하는 무상원조와 무

73) 1959년 12월에 이루어진 성진제강소 형강압연직장 완공이 마지막이었다. ПГАЭ, Ф. 365, ОП. 2, Л. 1715, л. 202.

역 합의는 향후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잔여 무상원조 재원을 흥남비료공장의 생산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무상원조의 제공은 북한이 소련의 정책 권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소련은 제1차 5개년계획을 앞두고 북한의 조속한 공업화 정책의 속도 조절을 유도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1956년 여름 소련을 방문한 이후에 기존 생산시설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투자를 제한하며, 무역 수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출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1957년에 시작된 제1차 5개년계획의 초기 국면은 무상원조를 수반한 소련의 정책 권고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이 전후에 북한에 제공한 총 13억 루블의 무상원조는 1950년대 북한의 전후 복구 및 3개년계획과 제1차 5개년계획 기간까지 북한의 경제 정책 및 산업 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되었다. 첫 번째 협정으로 약속된 10억 루블 중에 주요 산업생산시설 복구에 배정된 재원은 1959년까지 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외에 북한이 청구할 수 있는 무상원조 재원은 일차적으로 1955년까지 사용이 완료되었으나 1956년 8월 협정으로 재원이 늘어난 덕에 1960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1956년은 전쟁 이후, 더 넓게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시기부터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소련이라는 존재와 북한 지도부의 관계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시기로 여겨진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은 그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특히 무상원조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일 여지도 있다. 1957년에 시작된 제1차 5개년계획을 앞두고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고, 소련은 3억 루블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경제원조로 호응하였다. 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전망이 의견 불일치로 나타날 수 있었으나, 전후 복구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주의 건설의 과제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요구했다. 북소 관계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대사회주의 진영 관계와 정책은 당대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경제건설』, 『근로자』, 『인민』
과학원 역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편, 『력사논문집 (사회주의 건설편)』 4,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0.
- 리기영, 『(8·15 해방 10주년에 대한 강연 자료) 위대한 소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이 인민들이 조선 인민에게 주고 있는 거대한 원조와 민주 진영 제국가들 간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 평양: 국립출판사, 1955.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30·57·73·74·76·80, 1998~2016.
- 박종호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2, 선인, 2010.
- George Ginsburg and Robert M. Slusser, *A Calendar of Soviet Treaties, 1958-1973*, Alphen aan den Rijn: Sijthoff, 1981.
- "Li Fuchun's Report on Sino-Korean Trade Negotiations," September 30, 1957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171>).
- "Report of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Poland in Korea," July 16, 1953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4953>).
- "Speech by Kim Il Sung at the August Korean Workers' Party Central Committee Plenum," August 30, 1956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20166>).
- АВПРФ, Ф. 0102, ОП. 10, "О состоянии Экономики КНДР /краткая справка/."
- АВПРФ, Ф. 0102, "Справка об итогах поезд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в страны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ции."
- АВПРФ, Ф. 0102, "Протокольная запись совещания дипкорпуса в КНДР по вопросу о взаимном обмене информаци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полнения соглашений по безвозмездной помощи корею."
- АВПРФ, Ф. 0102, ОП. 10, "Справка о мероприятиях ТПК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НДР по повышению жизненного уровня населения."
- РГАЭ, Ф. 365, ОП. 2, Д. 27·64·1715.
- РГАЭ, Ф. 413, ОП. 13, Д. 185·7748·7804.
- РГАЭ, Ф. 413, ОП. 37, Д. 37.
- РГАНИ, Ф. 5, ОП. 28, Д. 315·410·411·412·486.
- 강호제, 『북한 과학기술 형성사』 1, 선인, 2007.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 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양준용 역, 『기묘에 선 북한경제: 대외경협을 통해 본 실상』, 한국경제신문사, 1992.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 선즈화 저, 김동철·김민철·김규범 역, 『최후의 천조(天朝):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2017.
- 안드레이 란코프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 오름, 1995.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5.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Bala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5.

김재웅, 『195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과 북소 관계의 균열』, 『사총』 10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1.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1998.

_____, 『소련의 북한 전후 복구 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심의섭, 『북한의 對러시아 인력협력: 벌목공을 중심으로』, 『경영연구』 18권 1호,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 경제학: 1950년대 소련, 중국, 동유럽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이재훈, 『1956년 8월전원회의 직후 중·소의 개입과 북한 지도부의 대응』, 『역사비평』 119, 역사비평사, 2017.

이주호, 『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식민지 경제유산의 계승과 극복 과정에 분단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3, 고려사학회 2016.

_____, 『1950년대 후반 소련 대외경제연락위원회(ГКЗС) 주북한대표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193, 한국사연구회, 2021.

조수룡, 『북한의 전후 복구 37개년계획(1954~56) 수정과 1955년 봄 식량 위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_____,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1957~61) 초안과 탈소련화의 개시』, 『역사학보』 249, 역사학회, 2021.

Erik van Ree, “The Limits of Juche: North Korea’s Dependence on Soviet Industrial Aid, 1953-76,”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5, issue 1, 1989.

Karoly Fendler, “Economic Assistance from Socialist Countries to North Korea in the Postwar Years, 1953-1963,” *North Korea: Ideology, Politics, Economy* (Han S. Park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6.

The Continuance and Change of the Soviet Union's Grants to North Korea in the 1950s: With a focus on the economic aid agreement of August 1956

Jooho Lee*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economic aid received by North Korea based on the Soviet Union's second economic aid agreement concluded on August 4, 1956. In September 1953, the Soviet Union promised a total of one billion rubles as a grant to North Korea. The financial sources of the grant were exhausted by 1955 except for the ones directly allocated to restore major production facilities. The exhaustion of the grant sources would be an adverse condition in the future economic management of North Korea. Moreover, North Korea was approaching the deadline to repay a loan from the Soviet Union. The North Korean regime asked for additional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The delegation of the Kim Il-sung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paid a visit in June and July 1956 and had negoti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fter promising the exemption and postponement of North Korea's loan repayment, the Soviet Union made an agreement with the regime in August 1956 to offer an additional grant of three billion rubles by 1961 in the period of the First Five-Year Plan(1957-1961). The Soviet Union's second economic aid agreement with North Korea provided some grounds for the regime to ensure the supply of the goods it needed during the first Five-Year Plan period through grants. North Korea partially revised its old plan to use the grant and accepted the

* Ph.D. Korea University

Soviet Union's criticism of its industrialization policies. The socialist camp including the Soviet Union offered North Korea economic aids throughout the 1950s, and they supported North Korea's post-war recovery and national management. The economic aid agreement concluded in August 1956 was a token of North Korea-Soviet Union relations kept intact in principle despite the fact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sides began to deteriorate in the middle 1950s.

Key words : reconstruction, grant aid, First Five Year Plan, Soviet-DPRK relation, loan, economic aid agreement